
정책참고자료

2019-23호



목 차



1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10
--	----

-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 선정, 1202개 개선방안 수립 -

3 중소벤처기업부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	13
-----------------------------------	----

- 군산 공설상권 등 3차 사업대상지 5곳 추가 선정 -

4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17
--------------------------------	----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시상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AI정밀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체험관 오픈	22
--------------------------------	----

- '20년 1월부터 일반인 대상 닥터앤서 체험서비스 제공 -

6 문화체육관광부

나는 "행복하다" 64%, 한국인 "자랑스럽다" 84%	30
--------------------------------	----

- 문체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발표 -

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통해 무병·우량한 곤충종자 공급	36
-----------------------------	----

- 충북 청주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준공 -

8 환경부

무인비행선으로 산단 미세먼지 배출 촘촘히 살핀다

-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 활용하여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상세 감사-

39

9 고용노동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 고용부·복지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합동 지원 방안 발표 -

44

10 여성가족부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이주여성 입국 전·후 개인정보 동의 후 다문화가족센터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 다각적 지원 -

50

11 국토교통부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 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55

12 해양수산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

5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선다.
-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487명(39%)이며, 이 가운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842명(57%)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에서 총 299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유형별로는 도로 횡단 중 144건(48%), 차도 통행 중 27건(9%),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9건(6%),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209건(7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건(19%), 신호위반 11건(4%)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는 10월(38건)에 가장 많았고, 요일은 토요일(53건), 시간대는 오전시간(10~12시, 52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에는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도 확보, 보행동선 연결,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26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우선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168건(64%)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차로 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93건(36%)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또한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인 만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번	지자체		대상지점	‘18년 사고현황			‘16~‘17년 다발지역	
	시도	시군구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16년	‘17년
15개 시도 / 41개 시·군·구 / 47개 지점								
1	서울	중구	오장동사거리 부근	2	2	0		
2	서울	용산구	원효빌딩 부근	3	2	2		
3	서울	동대문구	동서시장 부근	15	0	15	√	√
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우체국 부근	13	1	12		
5	서울	성북구	성북녹십자약국1호 부근	2	2	0		
6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9	2	7		
7	부산	중구	신천지시장 부근	11	0	11		
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14번길 부근	15	0	16	√	√
9	부산	남구	조광빌로체아파트 부근	4	2	2		
10	부산	해운대구	반송주공아파트정문 부근	10	0	10		
11	부산	연제구	김성규내과의원 부근	2	2	0		
12	대구	북구	태전중앙시장 부근	4	2	2		
13	인천	연수구	나래병원 부근	2	2	0		
14	광주	서구	양동시장역 부근	5	2	3		
15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부근	5	2	3		√
16	광주	북구	광주은행문화동지점 부근	4	2	2		
17	광주	북구	광주북성중학교정문 부근	2	2	0		
18	대전	대덕구	SK맘모스주유소 부근	4	2	2		
19	경기	성남시	모란삼거리 부근	8	0	8		√
20	경기	성남시	미금역사거리 부근	8	0	8		
21	경기	의정부시	탑라인의원 부근	8	0	8	√	√
22	경기	안양시	뉴코아아울렛평촌점 부근	7	0	7		
23	경기	부천시	솔안공원입구 부근	3	2	1		
24	경기	남양주시	용한의원 부근	7	1	6		

연번	지자체		대상지점	'18년 사고현황			'16~'17년 다발지역	
	시도	시군구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16년	'17년
25	경기	용인시	용인사거리 부근	3	2	1		
26	경기	파주시	메디인병원 부근	8	1	8	√	
27	강원	강릉시	하나은행강릉중앙지점 부근	7	0	7	√	
28	충북	청주시	석교육거리 부근	9	0	9	√	√
29	충북	제천시	남천약국앞교차로 부근	7	0	7		
30	충남	천안시	요방리삼거리 부근	2	2	0		
31	충남	아산시	관광호텔사거리 부근	8	0	8		√
32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오거리 부근	9	0	9		
33	충남	태안군	태안프라자 부근	7	0	7		
34	전북	김제시	전통시장사거리 부근	7	0	7		
35	전남	목포시	목포광주약국 부근	2	2	0		
36	전남	여수시	조은한의원 부근	11	0	11		√
37	전남	순천시	성동오거리 부근	7	1	6		
38	경북	포항시	데코라인가구포항점 부근	5	2	3		
39	경북	포항시	동해약국 부근	3	2	1	√	
40	경북	김천시	제일낙시 부근	7	0	7		√
41	경북	영주시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부근	7	0	7		
42	경북	영천시	영창빌딩 부근	7	0	7		
43	경남	창원시	동마산새마을금고본점 부근	4	2	2		
44	경남	통영시	롯데리아통영점 부근	11	0	11	√	
45	경남	통영시	시민약국 부근	8	0	8		√
46	경남	통영시	통영문화관 부근	2	2	0		
47	제주	서귀포시	남원약국 부근	5	2	3		

□ 노인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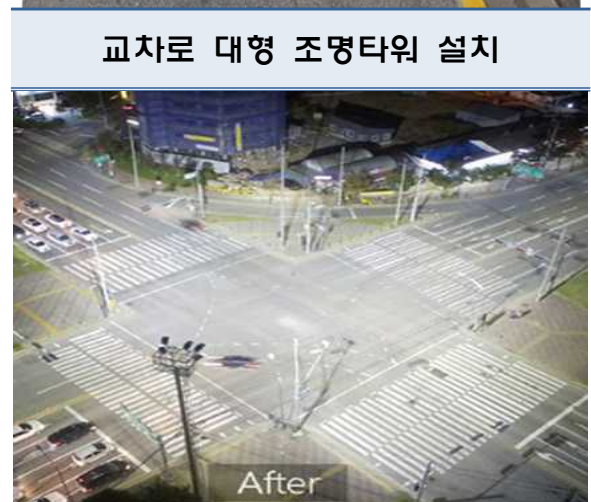
□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 보행자 동선 단절로 보행안전성 저하



□ 불법주정차 및 횡단보도 주변 야간 시야확보 미흡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 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

-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만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 진부비행장은 군(軍)이 1973년 대간첩 및 국지도발대비 작전 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국방부의 「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 결정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軍)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후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진부비행장 부지는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지여서 향후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민원은 ‘지역의 작은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복잡한 ‘갈등민원’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갈등민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육군 36사단, 평창군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현장 조사를 거쳐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진부비행장과 같은 전국 33 곳의 헬기예비기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과제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보였다.

그 결과,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법률적 근거 미흡 ▲기지 관리·운영 소홀 ▲주택가·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주민 불편 초래·불만 유발 ▲지역개발 저해와 대체지 선정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참에 작전성을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된 기지의 경우 안정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 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국 33곳 중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진부비행장 등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조정 회의를 통해 폐쇄와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진부비행장 민원해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2015년 열린 현장조정 회의에서 당시 상임위원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가 미완(未完)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다시 한 번 중재를 거쳐 지역갈등을 만들어 온 진부비행장의 폐쇄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4년 전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민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
- 군산 공설상권 등 3차 사업대상지 5곳 추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9일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3차) 사업 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 군산 공설상권, 부산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관악 신원상권, 공주 산성상권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일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개별 지원을 벗어나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8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이 사업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18.12월)로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5곳의 상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곳의 상권을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차별 지원 계획(누계) : ('18) 3곳 → ('19) 12곳 → ('20) 19곳 → ('21) 25곳 → ('22) 30곳

* (1차, '18.9월,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2차, '19.5월,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5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 군산은 근·현대사 인프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상권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군산세느강 축제, 군산형 백년가게 육성, 짬보선창 개발 등 군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부산 연제는 상권 내 연산 교차로를 형상화한 오방색을 주요 테마로, 인근 유동인구를 상권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오방길 빛 테마거리, 연일시장 창업몰 조성, 오방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빛·맛·멋'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강원 정선은 고객 유입을 위한 동선 연결, 체험의 확장을 목표로 정선 삼시세끼, 정선 포레스트와 알베르게(숙박·카페·팝)를 거점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고유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은 도림천, 신림역 등 상권이 가진 주요 자원을 활용해 생기 넘치는 도림천 축제, 순대타운 특화 프로그램, 서원동·신원동 릴레이 공연 등 도림천을 중심으로 두 상권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예상된다.

충남 공주는 공주산성, 제민천 등 매력적인 역사·문화 요소를 활용한 백제 테마거리 조성 과 공주 알밤한우·고맛나루 브랜드 마케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등 상권 특화요소 간 연계전략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선 분야별 전문가 진단·자문*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경제, 도시재생,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을 진단하고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상권에 상권 르레상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자체 및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개요

- (사업목적)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
- (선정현황) '18년 3곳 및 '19년 상반기 4곳 등 총 7곳의 상권 선정
 - * (1차, '18.9월,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 (2차, '19.5월,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
- <참고> 연차별 선정계획(누계, 곳) : ('18) 3 → ('19) 12 → ('20) 19 → ('21) 25 → ('22) 30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요건) ① 점포수 :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 ②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최근 2년간 감소
 - ③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지원규모) 구역당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19년 하반기(12월) 선정 상권부터 상권르네상스 총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 (기준) 상권당 80억원 → (개선)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 주요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힐링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시상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12월 10일(화)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장애학생 지원이 우수한 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관계자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대학에 우수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은 2013년부터 개최해 왔지만 수상작과 대학의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수상작은 모두 15편으로 장애대학생·학부모, 도우미, 대학관계자 세 부문에 걸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각기 선정되었다.
 - 대상 수상자 3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 12명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 장애대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혜경 학생은 “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서툰 도움을 베풀며 더 큰 꿈을 얻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꿈을 꿀 수 있어서, 시각 하나쯤 없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나는 늘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수기로 많은 감동을 주었다.

- 시상식에 이어서 서강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서강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수련회와 무료 영어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 연세대학교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통해 학내 이동을 지원하고 교재제작, 튜터링, 선배 멘토링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공모전 입상작 목록
2.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공모전 대상 입상작 요약
3.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요

부문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훈격
장애 대학생	대상	한혜경	아주대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	김진영	연세대학교	두 세계가 맞닿는 순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상
	우수상	최강열	위덕대학교	학습 장벽을 초월한 원격교육 모두 다 함께 하는 수업!	
		송예슬	이화여자대학교	동행의 여정	
		임제균	연세대학교	백견 불여일문	
		김민영	우석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및 원격지원(숙기사)이용 수기	
		김현태	경기대학교	다시 찾은 꿈! 열정의 날개가 돋다!	
		안용환	인제대학교	어느 마지막 수업일기	
장애 대학생 도우미	대상	김성희	인덕대학교	정민아(가명)~ 잘 할 수 있어. 아니 넌 잘하고 있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	안민욱	원격교육지원센터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도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상
	우수상	오은희	순천향대학교	존중하면 보여요, 먼지차별!	
		박상은	부산대학교	진정한 교감을 위한 '소통'	
장애 대학생 지원 담당자	대상	이주희	연세대학교	배려를 넘어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	박혜미	서울신학대학교	삶의 길잡이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상
	우수상	안영주	강남대학교	시작은 '다름'을 이해한 그 '다음' 부터	

< 장애대학생 부문 :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

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내가 겪어내고 있던 어려움들에 깊이 공감해주던 도우미들은 어느덧 도우미보다 친구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며 되려 고마워하기도 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어봤다던 친구, 지하철에 유도블록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해주던 친구,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참 다르게 느껴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웠는데 날 만나고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던 친구 등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만큼 친구들은 나를 통해 많은 것을 돌이켜보았다고 했다. (중략) 난 잘 할 거라며 응원해주던 친구들 덕분에 나는 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직접 장애학생도우미가 되어 보는 것이었다. 마침 청각장애 학생이 원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대필도우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속기만큼은 못하더라도 대필도우미로서는 잘 할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된 장애학생도우미 생활은 행복했다.

- 한혜경 학생(아주대학교)

< 도우미 부문 : 정민아(가명)~ 잘 할 수 있어. 아니 넌 잘하고 있어! >

정민아가 가끔 미안하다고 망설일 때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편의제공 등에 관해 알려주며 수업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요구하라고 말해주었다. (중략) 통역 외에는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힘을 내도록 계속 격려와 도전의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도 가끔은 가족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로 인한 고민도 털어놓는 정민아가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와우 수술을 한 상태로 집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이 수어가 아닌 대화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끔은 깊은 대화에 목마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중략) 방학 중에는 언니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첫 인상과는 달리 이제 정민이는 21살 또래 아이들처럼 수다도 떨고, 웃기도 잘하고, 과제가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기도 하는 보통의 여대생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 김성희 도우미(인덕대학교)

< 교직원 부문 : 배려를 넘어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

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생활을 했던 장본인이었다. 학생 시절, 학교와 교수님께서 나의 시각장애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원해 주었고,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 왠지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워했던 것이 생각한다. (중략)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불편함과 차별, 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즉,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지원이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대학에서 장애인 고등교육권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이주희 교직원(연세대 학교)

□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1:00~16:00
- (장소)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31F
- (주최/주관)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요내용)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 (참석)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공모전 수상자 15명,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관계자 등 150여명

□ **행사 일정**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직무 관련 특강	11:00~11:10 (10')	<개회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축사>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11:10~11:35 (25')	<특강 I> 유튜브 '위라클' 운영자 : 박위
	11:35~12:00 (25')	<특강 II> '세상을 바꾸는 시간' 출연 강사 : 이원준
중식	12:00 ~ 13:10 (70')	중식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	13:10 ~ 13:25 (15')	<축하공연> 뮤지컬 싱어즈
	13:25 ~ 13:35 (10')	<인사말>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13:35 ~ 13:40 (5')	공모전 추진경과 및 심사 보고
	13:40 ~ 13:50 (10')	<입상작 공유> 공모전 수상자 영상
	13:50 ~ 14:40 (50')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 및 기념촬영
성과 공유회	14:40 ~ 15:00 (20')	'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성과
	15:00 ~ 16:00 (60')	<대학 발표> 장애대학생 지원 우수사례

한국형 시정밀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 체험관 오픈!

- ' 20년 1월부터 일반인 대상 닥터앤서 체험서비스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목)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체험관 개관식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알렸다.

□ 체험관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4층)와 아산생명과학연구원(1층) 2곳에 마련하여 운영되며, 건강검진 시 체험하거나 닥터앤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닥터앤서 홈페이지(<http://dranswer.kr>)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s://ails.amc.seoul.kr>)

○ 이번 체험관 개관은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특히, IBM의 닥터왓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닥터앤서’가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국민 앞으로 다가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 이날 체험관 개관식 행사장에서는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질환 등 3대 질환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실제 적용했던 모습*을 공개하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 ①환자 진료기록(영상 등) 조회 → ②데이터기반 3대 질환 SW 알고리즘 구동
→ ③분석결과에 대한 의료진 설명 등

○ 시연에 참석한 병원관계자는 “닥터앤서 SW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 해석·판독하여 개인 맞춤형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놀랍다, 앞으로 의료진의 역할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면서 닥터앤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병원장인 크나위(Bandar Al Knawy)는 축하영상을 통해 “닥터앤서의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 내 교차검증 (Cross Validation)을 통해 ‘닥터앤서’가 사우디에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닥터앤서’는 지난 7월 임상시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시제품으로 개발된 3대 질환(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질환) SW를 서울아산·분당서울대·고대구로병원 등 11개 참여병원에서 의료 현장적용을 위한 사전단계로 임상 적용을 진행 중이다.

○ 이 외에도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대 질환 관련 SW는 '20년까지 개발 완료 및 식약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임상과 진료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닥터앤서’는 3년간('18~'20) 총 357억원(정부 280,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

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SW를 최종적으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표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단장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닥터앤서’를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능 실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가 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 4차산업의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선순환 융합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목적) 국민들이 AI기술을 적용한 '닥터앤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 개관·운영
- (일시/장소) '19.12.12(목), 16:00~17:30 /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 (참석대상)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회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닥터앤서 참여기관(병원, 기업) 관계자 등(약 300명)

□ 주요 내용

- (체험관) 서울아산병원 신관 건강증진센터 4층 (진료/검진대상자 공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일반인 공개)
- (전시내용) 닥터앤서 홍보 영상 및 KIOSK를 통한 SW 간접 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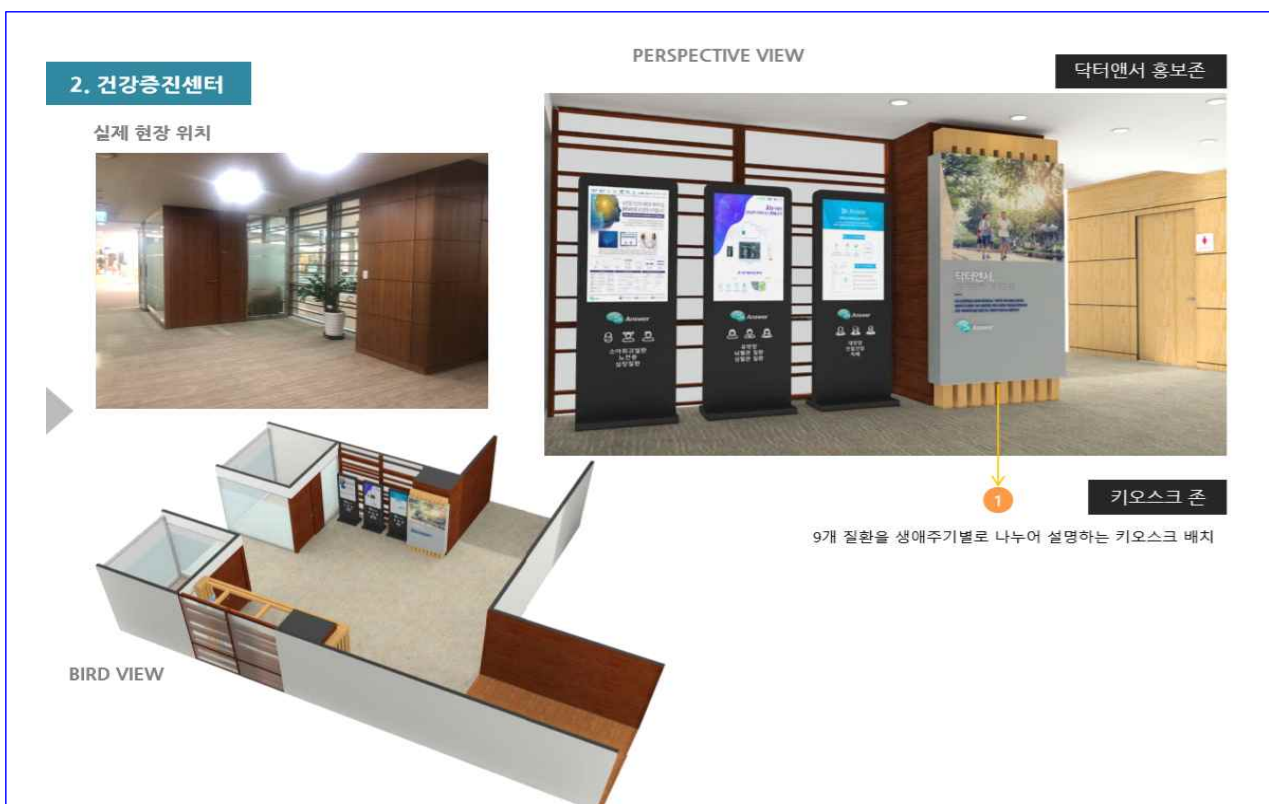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05(05')	○ Opening	-
16:05 ~ 16:10(05')	○ 국민의례, 개회 및 VIP소개	사회자
16:10 ~ 16:35(25')	○ 축사 및 격려사	서울아산병원장 과기정통부 2차관 국회의원
16:35 ~ 16:45(10')	○ 닥터앤서 추진현황 및 실증 추진계획 - 사우디 국가방위부병원, 미국 유타대병원 축하영상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16:45 ~ 16:55(10')	○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허가 심사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정림 과장
16:55 ~ 17:00(05')	○ 닥터앤서 SW 진료현장 적용 사례	류 노 김현준 부사장
17:00 ~ 17:05(05')	○ 기념촬영	참석자
17:05 ~ 17:30(25')	○ 닥터앤서 체험관(건강증진센터) 방문 및 체험 - 닥터앤서 체험관 현판식 - 닥터앤서 시연 및 체험	참석자

◇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및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설치되는 닥터앤서 체험관은 '20년 1월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1 건강증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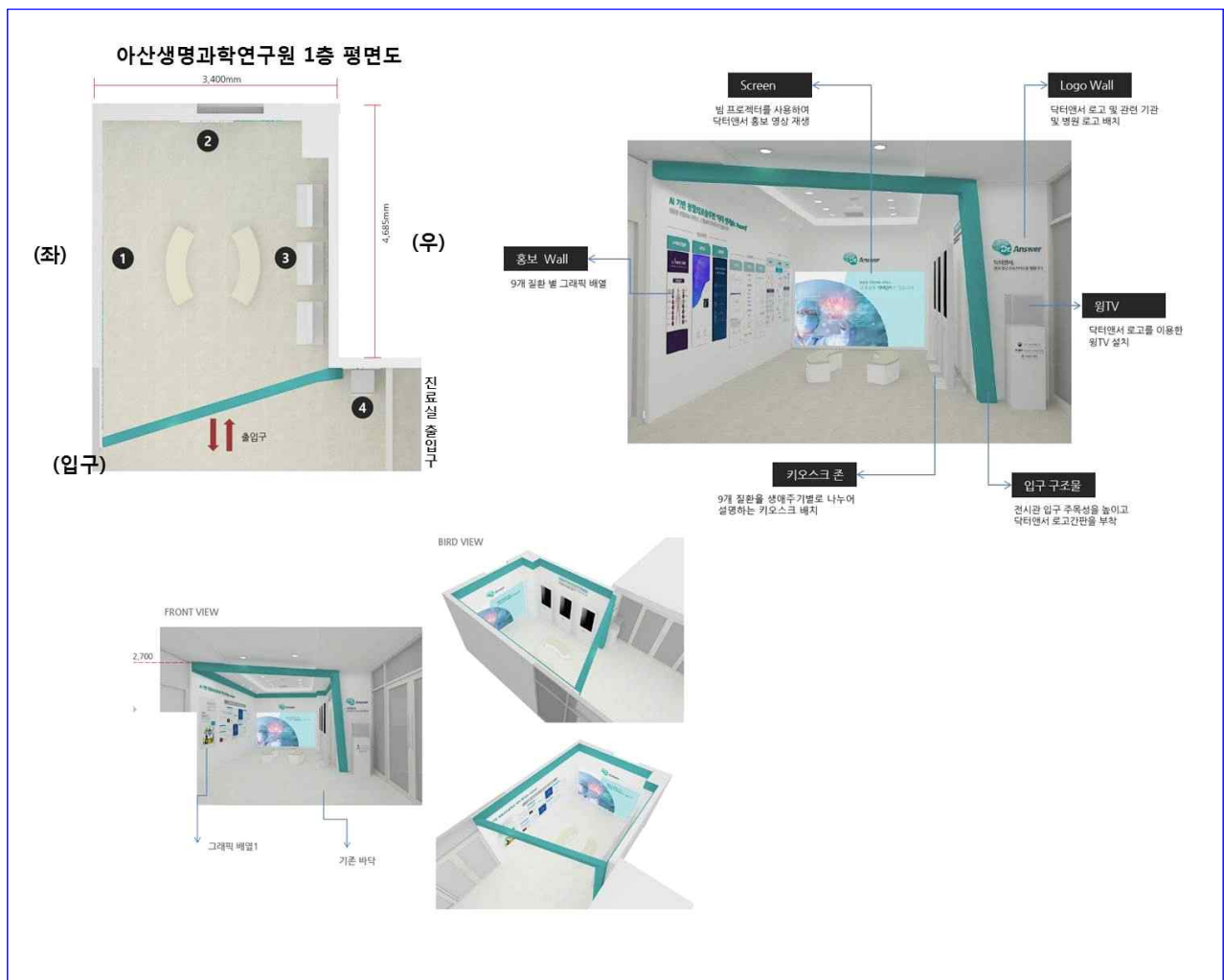
- 장소 : 서울아산병원 신관 4층 건강증진센터 (규모 : 24.75m²)
 - *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연간 건강증진센터 수진자 : 40,000명)
- 운영방식 : 건강증진센터 수진자 및 보호자 대상 홍보
- 전시내용 : 키오스크를 활용, 닥터앤서 8개질환 특징점 등 소개
- 구성도



- ☑ 키오스크는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배치
- ▶ 키오스크 1 : 영유아기(소아희귀, 뇌전증, 심장질환)
 - ▶ 키오스크 2 : 중·장년기(유방암, 뇌혈관, 심혈관)
 - ▶ 키오스크 3 : 노년기(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2 아산생명과학연구원

- 장소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규모 : 16.5㎡)
- 참관객 :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방문 일반객, 외부 일반인, 임상연구 시험센터 이용 환자 및 보호자 등
- 운영방식 : 사전예약 운영(주2회)
 - 닥터앤서 홈페이지(www.dranswer.kr) 및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운영
- 전시내용
 - 대형 스크린을 통한 닥터앤서 홍보 영상 상영 및 홍보 패널 부착
 - 키오스크를 통한 닥터앤서 SW 홍보 및 소개
- 구성도



<키오스크 전시 내용(안)>

① 닥터앤서 소개	 → 버튼 터치해서 이전/다음으로 이동
② 질환선택 화면	 → 버튼 터치해서 각 질환으로 이동
③ 질환세부 화면 (소아희귀 난치성유전질환)	 - 소아희귀질환 선택 → 질환 버튼 터치 후 나오는 화면 - 동영상 실행 → 동영상 종료 또는 X버튼 누르면 그래픽 화면 나타남 → 화살표 터치하면 다음 그래픽으로 이동
③ 질환세부 화면 (뇌전증)	 - 뇌전증 선택 → 질환 버튼 터치 후 나오는 화면 - 동영상 실행 → 동영상 종료 또는 X버튼 누르면 그래픽 화면 나타남 → 화살표 터치하면 다음 그래픽으로 이동
③ 질환세부 화면 (심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선택 → 1. 질환 버튼 터치 후 나오는 화면 2. 2가지 SW 버튼 생성 → 버튼 터치 후 나오는 화면 - 동영상 실행 → 동영상 종료 또는 X버튼 누르면 그래픽 화면 나타남

나는 “행복하다” 64%, 한국인 “자랑스럽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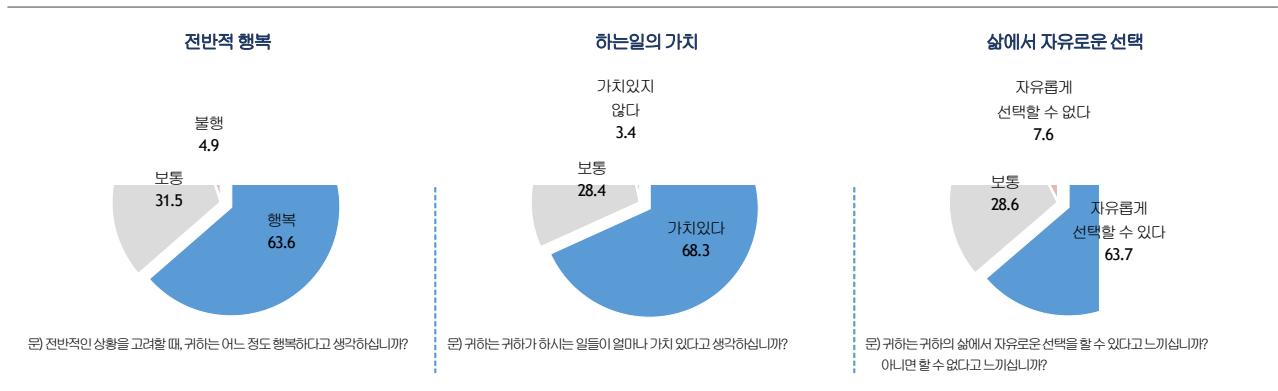
- 문체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발표 -

우리 국민 중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가 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96년 이래 2001년과 2006년, 2008년, 2013,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일곱 번째 이뤄진 조사다.

전반적으로 “행복” 63.6%, 가끔씩 “이유 없이 우울”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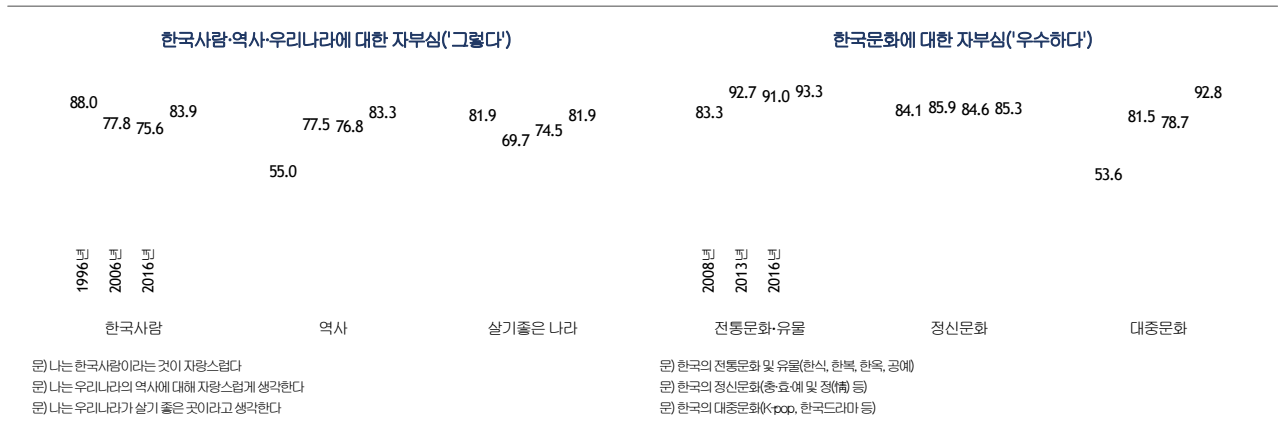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의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3%로 나타났다.

우리 역사 자랑스럽고 한국 대중음악(K-pop) 등 한국문화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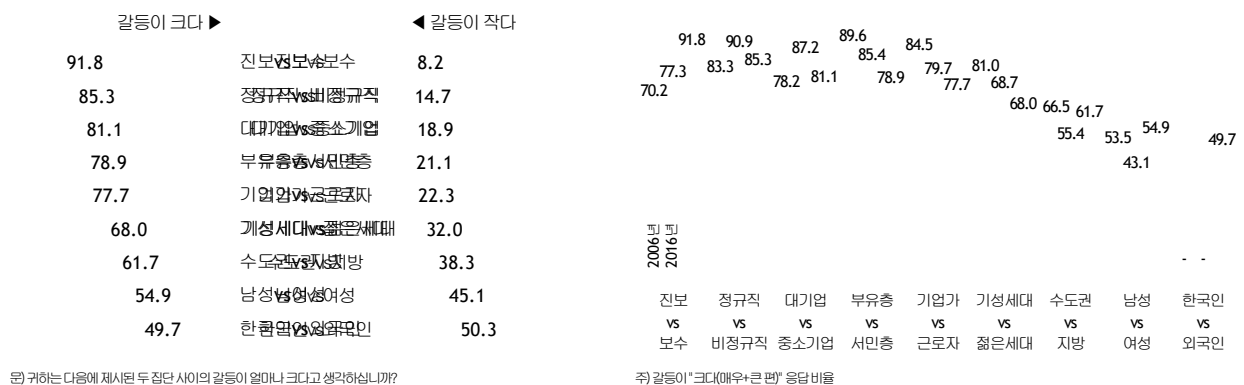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답변은 83.9%,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83.3%였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81.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및 유물, 정신문화, 한국 대중음악(K-pop) 등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93.3%, 85.3%, 9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에서보다 더 높아진 수치이다.



진보-보수 갈등 “크다” 92%... 3년 전보다 크게 늘어

한편, 우리 사회 주요 집단별로 갈등 중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결과보다 14.5%포인트(p)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어 갈등이 ‘크다’는 응답은 정규직-비정규직 85.3%, 대기업-중소기업 81.1%, 부유층-서민층 78.9%, 기업가-근로자 77.7% 등의 순서였으며, 남성-여성 간은 54.9%, 한국인-외국인 간은 49.7%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갈등 크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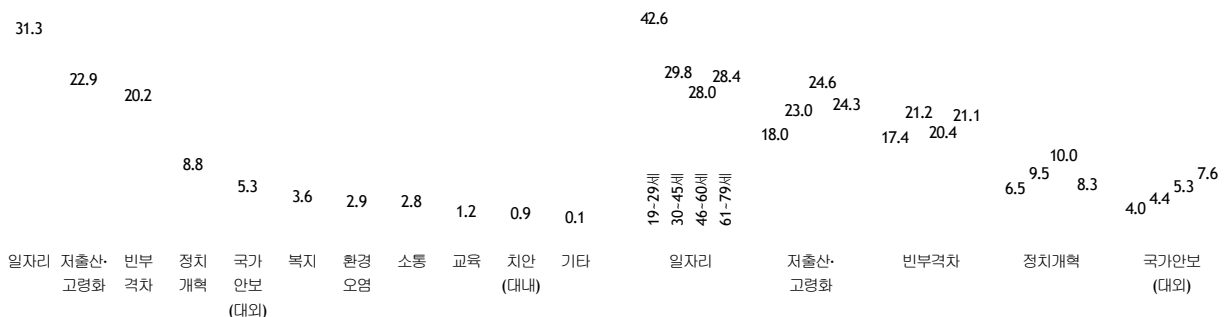


당면한 문제는 ‘일자리’-‘저출산’-‘빈부격차’ 순, 생활수준은 ‘비슷하다’고 느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일자리 (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뒤 이어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42.6%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의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응답자 특성별(5순위까지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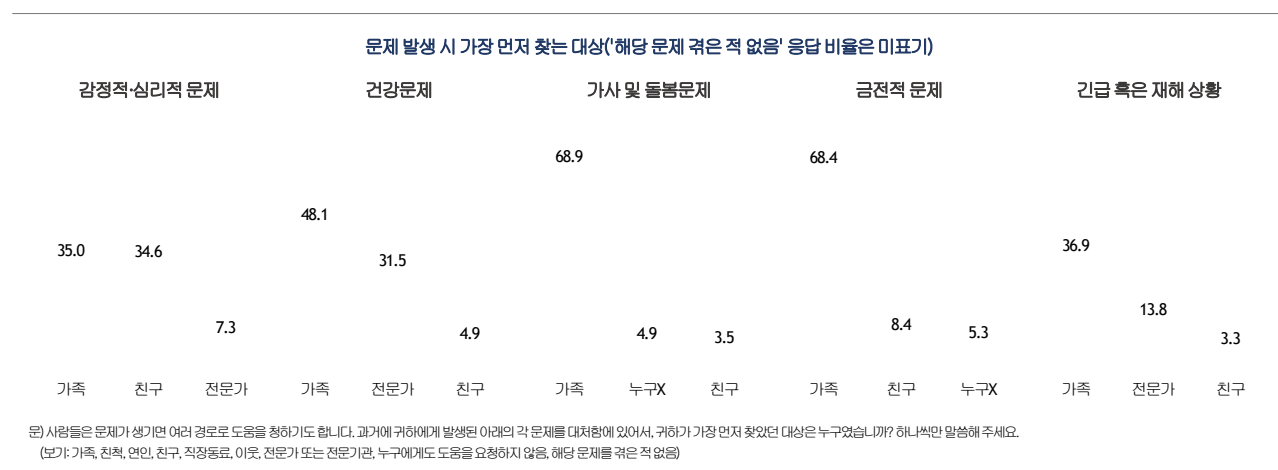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중산층 이하’ 59.8%, ‘중산층’ 34.6%, ‘중산층 이상’ 5.7%로 나타났으나,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내 생활 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9.7%,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9.9%로 나타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의 인식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의지는 가족, 신뢰는 친구와 이웃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를 물어본 결과, 문제를 겪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질문한 모든 항목에서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목에 따라 친구와 전문가(기관)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는 가족(35.0%), 친구(34.6%), 건강 문제는 가족 (48.1%), 전문가(31.5%) 등의 순이었으며, 가사 및 돌봄 문제는 가족 68.9%, 금전적 문제 발생 시에는 가족 68.4%, 긴급 혹은 재해 상황 발생 시에는 가족(36.9%), 전문가(13.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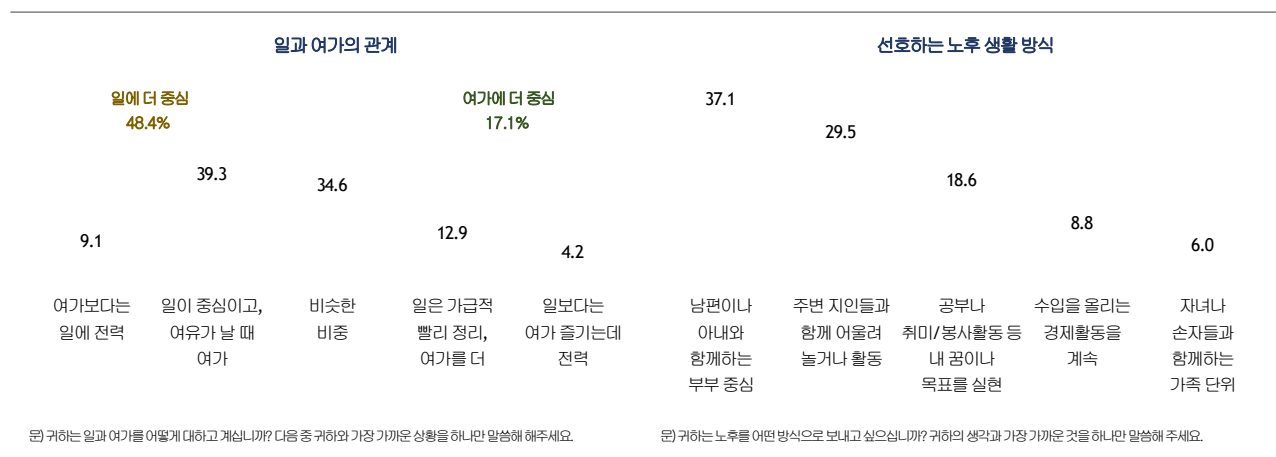
한편,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88.8%,

이웃을 '신뢰한다'는 62.9%였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는데, 각각 10.9%, 11.7%로 나타났다.

아직은 여가보다는 '일 중심'... 혼밥/혼술 등 증가

최근 일-생활 균형(위라밸: Work-Life V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여가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여가보다는 '일에 더 중심'을 둔 경우가 48.4%였으며,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34.6%, 일보다는 '여가에 더 중심'을 둔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식으로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으로'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 29.5%,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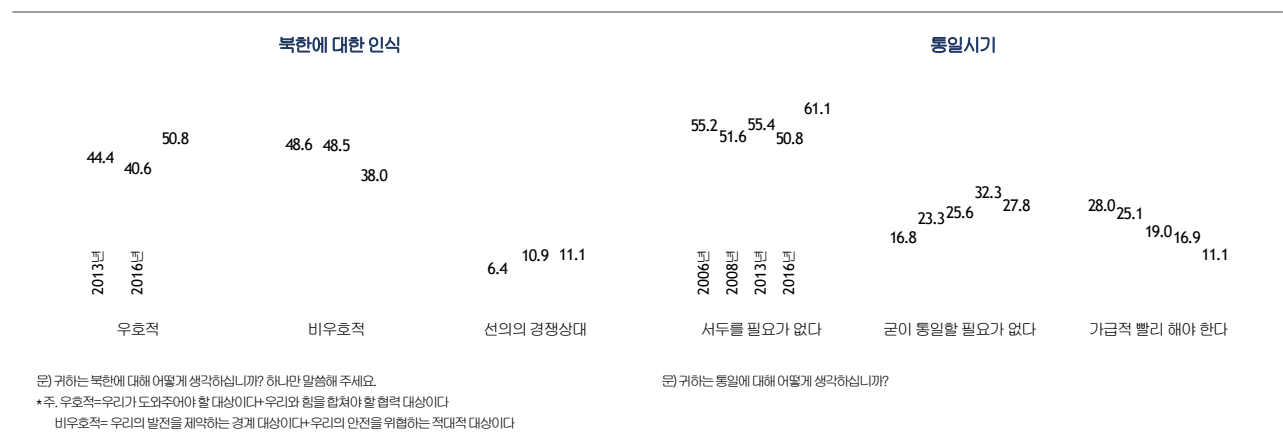
자유로운 생활 추구나 1인 가구 증가 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 이어 '혼밥,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22.6%,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17.0%,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9.2%, '반려동물 양육증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한편,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정치행위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가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명 운동' 13.8%, '후원/기부' 7.4%, '평화적 집회'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희망... 통일은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41.1%)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3.8%,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 1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이 대폭 늘어난 반면, 통일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져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기존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북한에 대해 ‘우호적 인식(50.8%,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8.8%+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 42.0%)’은 2013년 44.4%, 2016년 40.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1%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28.0%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해에는 11.1%로 나타났다.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2주 간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

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등록제 >

◆ **(정의)**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 **(목적)**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에 활용

◆ **(축산차량)**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또는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 **(등록절차)**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 **(운영효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통제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②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무인비행선으로 산단 미세먼지 배출 촘촘히 살핀다

-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 활용하여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상세 감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존의 무인기(드론),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앞으로 무인비행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 환경부는 무인비행선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산 국가산단(부곡지구, 고대지구)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 무인비행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 시기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방식은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사업장 출입 없이 신속하게 측정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짧은 비행시간으로 활동반경이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 산단 감시를 위해 활용중인 드론은 1회 충전으로 20여 분의 비행이 가능
- 이에 반해 무인비행선은 커다란 크기(11m(L)×3.5m(W)×4.5m(H))에 비해 자체 중량은 30kg 정도로 가볍고 헬륨가스를 활용하여 부양하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4시간 연속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 또한 무인비행선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시료를 포집하고 측정가능한 측정기기(모듈)와 감시카메라를 장착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아울러, 사업자가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대형 비행선을 통한 감시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까지 병행 가능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서해안(시화·반월, 당진, 서천, 대산) 및 남해안(여천, 여수, 울산)의 대규모 산단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 향후, 위성에서 활용하는 초분광카메라를 장착하여 산단 지역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성 중에 있다.

< 무인 비행선 >



< 감시 대상 지역 >



- 김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의 저감은 온 국민이 함께하여 풀어갈 숙제이며 첨단 기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무인비행선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무인비행선 운영 사항.
2. 무인비행선과 무인기(드론)의 차이점.
3. 전문용어 설명. 끝.

□ 측정 및 감시에 필요한 무인비행선 조건

항목	제원/성능	비고
사이즈(L×W×H)	11m×3.5m×4.5m	
자체중량	30kg	배터리 4~6개 포함
탑재가능중량	5kg 내외	과적시 비행시간 축소
최대운용고도	1,000m	300m 이하로 비행추천(항공기 고도와 연관)
최대 비행시간	4시간	
운용 풍속	7m/s 이하	초분광카메라 장착시 Gimbal* 시스템 필수
운용반경	1,000m	자동 항공 시 제한 없음

* 풍속에 의해 비행선 기체가 흔들릴 경우 초분광카메라의 흔들림을 감쇄시켜주는 장비

○ (운행 고도) 굴뚝, 플레어스택, 주변 건물 등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항공안전법 상 운행고도를 감안하여 300m 높이에서 운영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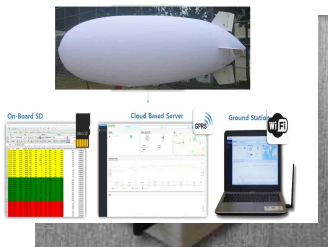
○ (비행구역 허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감시 대상 산단을 미리 선정하여 전체 감시기간에 대해서 허가 취득 예정

* 현재 국토부 시스템(원스탑민원처리)을 통하여 비행허가 시 2주정도 소요

□ 무인비행선과 결합 가능한 측정 장비

○ 측정센서(NOx, SOx, VOCs, 악취, PM2.5, 고도계 및 온도계)와 초분광카메라를 모듈식으로 장착하여 활용 가능

* 측정센서의 경우 3.4kg 정도(자체전력시스템 보유), 초분광카메라의 경우 3.5kg(무인비행선 전력 공유)



<대기오염물질 측정용
모듈>

<초분광카메라>

<비행선과 통신>

구 분	무인비행선	드론
이미지		
크기	11m×3.5m×4.5m(대형)	1.6m×1.5m×0.7m(소형)
비행시간	4시간 이상/1회충전 (헬륨을 이용하여 부양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최소)	20분 내외/1회충전
감시방법	상시감시에 적합	암행감시에 적합
측정방법	장시간 연속 측정 하여 오염의심지역 선별	단시간 측정 중 오염의심지역에서의 시료채취
캠페인 효과	표어나 문구 표시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각심 고취	—
장점	장시간 넓은 범위를 관찰 가능하여 초분광카메라 등 장착해서 활용 가능	단 시간내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측정이 가능(속도가 빠름)
단점	풍속에 영향을 받음	에너지 소모가 많음

1.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 ☐ 공장 굴뚝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감시를 위해 활용되는 드론의 경우 비행시간이 짧은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1회 충전으로 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을 활용하고자 한다.
- ☐ 무인비행선의 경우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장점 이외에도 사업자가 멀리서도 미세먼지 감시 중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는 순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 ☐ 또한, 비행선 외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슬로건을 인쇄하여 국민의 참여 또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감시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무인비행선에 장착 가능한 장비는?

- ☐ 측정센서(NOx, SOx, VOCs, 악취, PM2.5, 고도계 및 온도계)와 대기포집장치가 장착된 측정 모듈을 활용이 가능하며 고사양 감시카메라를 장착하여 오염원을 식별하는데 활용
- ☐ 산단지역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초분광카메라*를 장착하여 오염물질을 지도상에 인포그래픽화** 하는데 활용

* 초분광카메라 : 빛의 여러개의 영역(band)으로 세분화하여 오염물질의 흡광도 정도를 파악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이며 환경위성에서도 고해상도 초분광카메라를 이용하여 국가간 오염물질의 이동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 중에 있음

**인포그래픽 : Information + Graphic의 합성어로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 수치를 사진, 도형,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고 한눈에 들어오게 설명하는 새로운 정보전달 방법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 고용부·복지부, 장애인 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합동 지원 방안 발표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12.12(목) 08:30)하여
 -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배경】

-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직업재활시설* 최종종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회·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 * 일반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
- 이에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정부(고용부, 복지부) 등 13명

□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되어 있다.

○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transfer)*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 전환(Transfer): 상위시설로의 이동,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의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취업비율: 3.3%(직업재활시설협회, 2017)

-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져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여전히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1.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

□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한 규정 신설(2019년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 또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그리고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생활로 인한 지출 비용 : 월평균 12만 원(2018년 실태조사)

-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2.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직

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성과** 등 개별시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한다.

-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구분	현행(2019년)				⇒	2020년 인상(안)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월 지급 단가(만 원)	30	40	50	60		30	45(+5)	60(+10)	80(+20)

- 또한, 좋은 장애인 일자리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의 기업들을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주로 적극 발굴·지원한다.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현재 350개소): 2018년 40개소→2019년 60개소→2020년 75개소

3.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 가칭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 * 직업적 장애기준 판정 : 개별 장애인의 근로능력(직업경험, 잔존근로능력, 근로동기 등)을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20년 모의적용, '22년 전면적용)
-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훈련·돌봄 등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4.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처우를 개선한다.
 -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 마무리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지자체·기관 공모 진행 -

-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여, 그 간의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 베트남 여성연맹 면담(2019.7.11.), 한국-베트남 영사협의(2019.7.25),

여성가족부장관 해외이주위원회 위원장(2019.10.4.), 베트남 여성연맹 부주석(2019.10.21.) 면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전문가 TF 구성 및 의견 수렴(2019.8.21.~9.11.)

-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 특정강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는 한편,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신규로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법무부)’에 참여할 때, 동시에 배우자와 그 부모 등은 ‘다함께 프로그램(2시간, 여성가족부)’을 진행

2

초기 적응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이 2019.10.1.부터 의무화 됨

-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2개소 확대 : (2019년 신설) 5개소 → (2020년) 7개소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 지원

-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5 참여 확대

-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폭력예방전문강사’,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새로 입국한 이주여성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 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귀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

	현 행	개 선
대 상 건 축 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③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통상 1,500㎡ 규모
		④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②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2일(목)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둘째,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 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 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경쟁률 2.1: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국비 기준) '20년 2,100억원, '21년 3,360억원, '22년 2,940억원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 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대표 사업계획 소개 》

1.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우선,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어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주민 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 조성도 병행하여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대표 사례 >>

◆ 전라남도 완도군 모도섬

(현 황) 모도섬은 모서·모동·모북항 등 3개의 여객선 기항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모두 협소한 선착장과 노후한 대합실 등 기반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사업)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 ① 선착장을 정비·확장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대합실은 매표소와 주민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여객편의시설로 조성한다.
- ② 어촌마을에 주민쉼터 리모델링, 마을 골목길 정비, 해녀 작업장 신축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모도항 사업 구상도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 >>

◆ 충청남도 서천군 송림항

(현 황) 송림항과 유부도는 갯골이 잘 발달된 천혜의 갯벌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생물자원관, 철새공원, 삼림욕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주요 사업) 송림항과 유부도를 연계한 갯벌생태관광을 브랜드화하여 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① 접안시설 정비, CCTV 및 안전 인프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② 송림항은 갯골안내센터, 생태조망대 및 체험길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유부도는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기능을 향상시킨다.

※ 특히, 송림항과 유부도를 잇는 갯골탐험선(연계사업)으로, 갯골 생태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대표적인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림 항 사업 구상도



3.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어촌은 창업플랫폼 및 귀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SW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 대표 사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

(현 황)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쇠퇴한 낙후지역으로, 특히 대항분교는 폐교 후 방치되어 유허 건물로 남아있다.

(주요 사업)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재생의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 ① 어항시설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 등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고, 해양레저 체험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 ② 폐교를 해양환경·귀어체험시설, 청년 예술가 공방, 특산물 홍보·판매장 등이 집약된 '바다학교'로 재탄생시키고 진입도로 및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어촌 재생의 구심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③ 바다학교와 바다지킴이 교실, 주민문화교실, 초보어부교실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대 항 항 사업 구상도



《 2020년도 내륙어촌 어촌 재생 시범사업 추진 》

이와 더불어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소외된 내륙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모 결과 접수된 15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10.15)와 현장평가(11.18~11.29), 종합평가(12.10)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경쟁률 2.5:1)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350억 원 규모로서,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 경남 1개소 및 전남 1개소는 인접한 시·군으로 공동사업 추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위치도

